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 비전2030을 넘어서 -

2019. 8. 23

우천식
KDI (글로벌경제실장)

Korea's Leading Think T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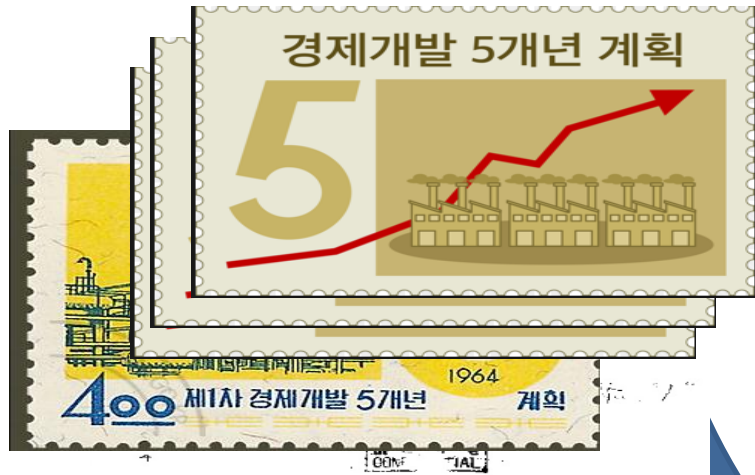
*For internal discussion only. Please don't cite or circulate

- 비전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소리 없이 결정한다. 비전은 우리의 **세계관**이다. 비전이 조화될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할 때 사회는 분열된다. 이해관계의 갈등은 단기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비전의 충돌은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Thomas Sowell (1987), 『비전의 충돌 (A Conflict of Visions)』 에서 재구성.

- * 비전이란? Desirable(Preferred) and Attainable Future
- * 전략이란? (주어진 현재에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축

>> 우리나라에서 경제사회발전의 큰 그림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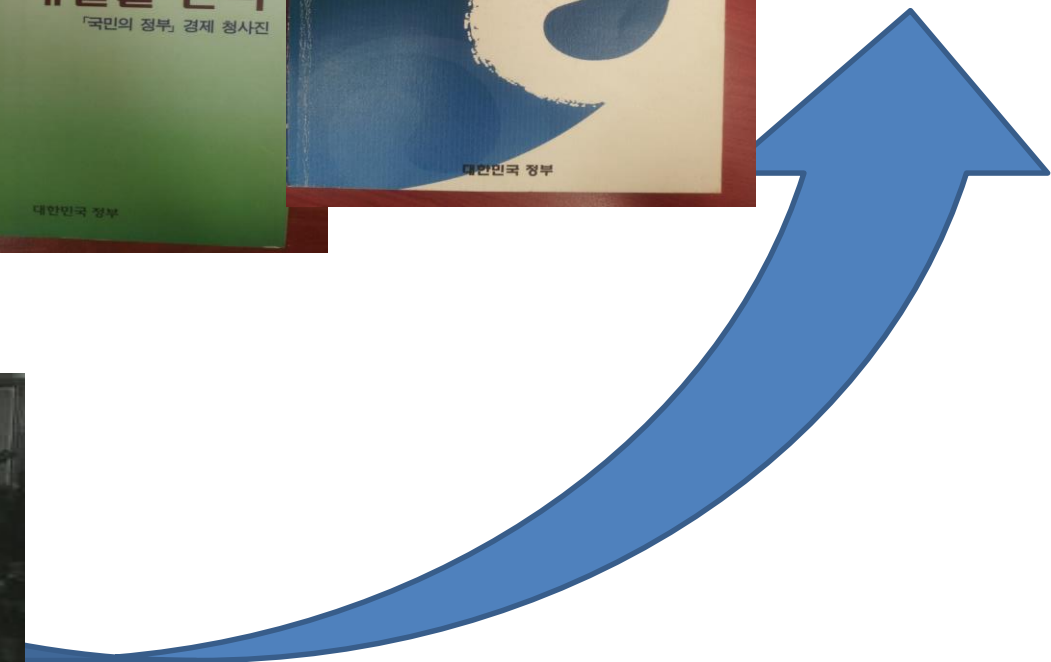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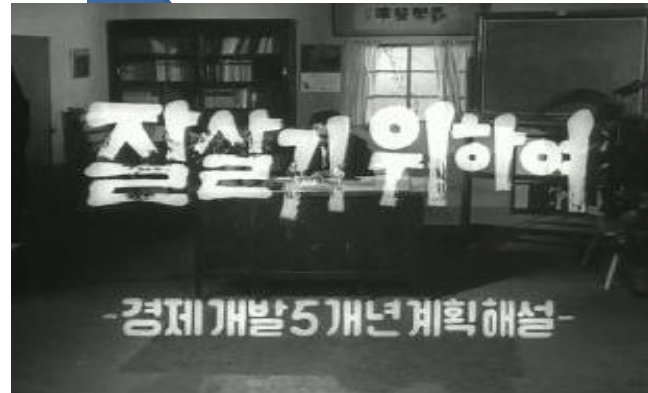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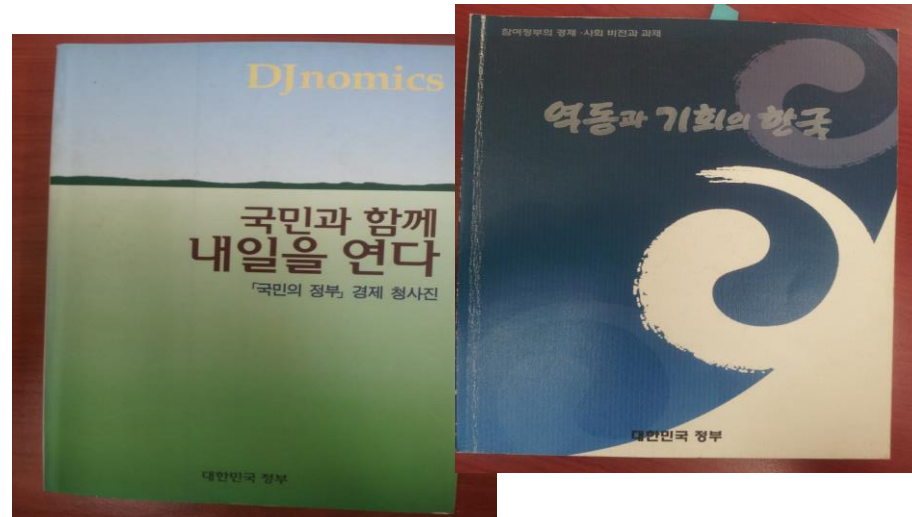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

(案)

4294年9月

經濟企劃院



- (연혁/성격)

- (1기) 경제개발5개년계획 ('62-'96; 총7차)

- * 5~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2기) 정책비전/전략/청사진 작업 – 국가공식 및 종합

- DJ노믹스, 노노믹스, 비전2030 (2006) 등

- (3기) 개별부서/위원회 중심의 부문별/이슈별 작업 (정례/수시)

- (종합/정례) 기재부 중장기전략 작업 (2012 이후)

- (이슈/정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차; 2015.12;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

- (이슈/수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 미래부 특별 T/F) 등

우리나라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에 관한 주요 작업 (I)

성격	주관기관	과제/보고서 명칭
종합 (국내)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기획부-KDI 미래기획위-K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2040/45(?) (2019) · 중장기 미래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2012) 등 · 비전2040 ('09)
	정기위 기획예산처-KDI 정기위 재경부-정기위-K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전략 (07.8) · 비전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06.12) · 역동과 기회의 한국 (2004) - 노노믹스
	재경부- K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 (2001) · 지식경제발전 종합정책연구 (1999)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DJ-nomics) (1999) ·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1997) ·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1995)
	21세기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의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1994)
종합 (국제기구)	세계은행 -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and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2001)
종합 (국내민간)	매일경제- 외국컨설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itor 보고서: Knowledge for Action(1998) · McKinsey 보고서: Productivity-led Growth (1998) · Booze. Allen. Hamilton 보고서: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1997)
	정보통신정책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2005)
	삼성경제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 있는 한국 (2005)

* KDI (1997),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1006-2020) 미발간

우리나라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에 관한 주요 작업 (II)

부문별 (국내)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Korea 기본계획 (2006.5) · IT839 (2004.2), u-IT839 (2006.2) · e-Korea Vision 2006 (2002)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발전 종합5개년 계획 (1999; 시안) ·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2차 2006, 1차 2001) ·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인력양성 계획(2005)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9) · 2006-2012 과학기술 부문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05)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2005)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2002.7) 등 ·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 (2006.1)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개혁 2020(2005)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한국 21-함께 가는 복지 (2005) · 새로마지플랜 2010(안) (2006)

미래전망 관련 과거 주요작업 검토 - 결과물 및 과정

주요작업의 연구범위(scope)는 6개의 주요 부문으로, 연구 초점은 대체로 미래예측/미래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범주 및 정책적 수용도는 보고서마다 다름.

주요문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정치	외교 안보
대한민국정부 및 KDI(2007) 비전2030	○	○			○	○
기재부(2012) 중장기정책과제	○	○				
정기위(2007) 미래비전과전략	○	○	○		○	○
경사연(2010) 선진화의 조건	◐	◐	◐		◐	
행정연(2009)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	◐	◐	◐	◐	◐
KISDI(2011) 디지털 컨버전스		●	●	◐	●	
KISTEP(2012) 과학기술예측	●	●	●	●	●	●

○정책제안 중심 ◐정책제안 및 미래전망 ●미래전망 중심 *원의 크기는 연구의 심도 및 정책적 수용도를 표시

국내 작업 - 평가

- 전반적인 발전: 양적, 질적
- 주제: 전문화
 - 총론 (국민경제 전체) ⇒ 분야별
- (수행/주관)주체: 다각화 및 전문화
 - 정부-출연연 (KDI) ⇒ 민간 (매경, 삼성 etc.),
 - 해외기관 참여: 국제기구(OECD, WB), 컨설팅
 - * 컨설팅사- McKensey, Booze, BCG, Bane etc.
- 질(quality): 심화 (연구역량 확대)
- But... 전반적인 정체상태 (stagnant)
 - Mannerism, fatigue, 냉소/회의
 - **효용성?** (특히 **시장경제 시대**에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비전과 전략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 * (개인이나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비전과 전략이 왜 필요한가?)

왜 미래연구 및 국가비전이 필요한가?

-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등장으로 전 세계의 모든 개인, 지역, 국가들이 지구촌 경제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 서로 촘촘히 얽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 ‘주어진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인류의 역량이 크게 증폭되었지만, 능동적인 행위 주체가 많아져 그 방향과 결과 또한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해 졌다.
-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환경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창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 정책기획위원회 (2007),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

* 국가의 역할: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의 제공자 (정보실패의 보정)

왜 국가차원의 비전이 필요한가 – 비전2030의 문제인식

- 1997년 말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및 경쟁력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정부주도-투입주도형 성장'으로 대변되는 종래의 발전 패러다임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의 지식격차, 제도격차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개방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주도형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 특히 개방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이 마무리 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성장동력의 확충은 물론 양극화, 동북아 질서 및 남북관계, 세대, 지역 간 갈등, 정치, 행정체계의 선진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단순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남북관계 등과 같은 문제들은 아직 공론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방향 및 정책수단, 그리고 성장 대 분배 및 제도혁신과 재정투자 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성격, 해법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및 발전궤도의 기준선 (baseline)에 대하여 사회성원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미흡하며, 새로운 시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과 에너지가 하나로 결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우천식 외(2007) KDI

비전2030(2006)의 상황 인식 – 문제 인식

-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비관론** 존재
 -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둔락
 - 최근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 **현 경제상황 및 정책에 대한 인식 혼란 ⇒ 쟁론**
 - **잠재성장률 하락 or 경기순환/조정 ?**
 - 현 정부의 정책실패 or 과거부실 요인 해소 및 미래를 위한 기반정비?
 - **양극화 문제: 자동해소 or 대응 가능 or 불가항력 or ?**

- **중장기 성장 및 발전궤도의 기준선(baseline) 부재**
 -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과 의미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간의 관계는?
- **필요 정책, 제도개혁은? 실행 능력, 제약조건, 대응 전략은?**
 - **정부, 여론주도계층의 리더십** 있는가? 재정의 역할은?
 - **교착상태: 성장 vs. 복지, 효율 vs. 형평, 제도개혁 vs. 투자**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우 천 식 (KDI)

- 2006.8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보고자료 및 민간보고서에 기초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대외적 여건

세계화 · 정보화의 급진전

전세계의 단일시장 통합,
무한경쟁 직면

BRICs의 급성장

세계경제 분업구도 급변,
비교우위 상실 우려

한반도 정세

대내적 여건

저출산 · 고령화 가속

'16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 부양부담 급증

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 상대적 빈곤감
→ 사회적 갈등 심화

성장 잠재력 저하

고용창출 약화,
저성장 고착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II.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동반성장 전략이란?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 정착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
- 미래는 사람이 경쟁력 → 사람에게 대한 투자 확대 : **기회의 형평**
-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게도 재기의 기회 부여

1. 시장경쟁단계 : 경쟁촉진 => 성장촉진

2. 시장이전/이후 단계: 사회적 보호 => 경쟁참여 확대 및 공정한 기회

비 전

함께가는 희망한국

목 표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전 략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수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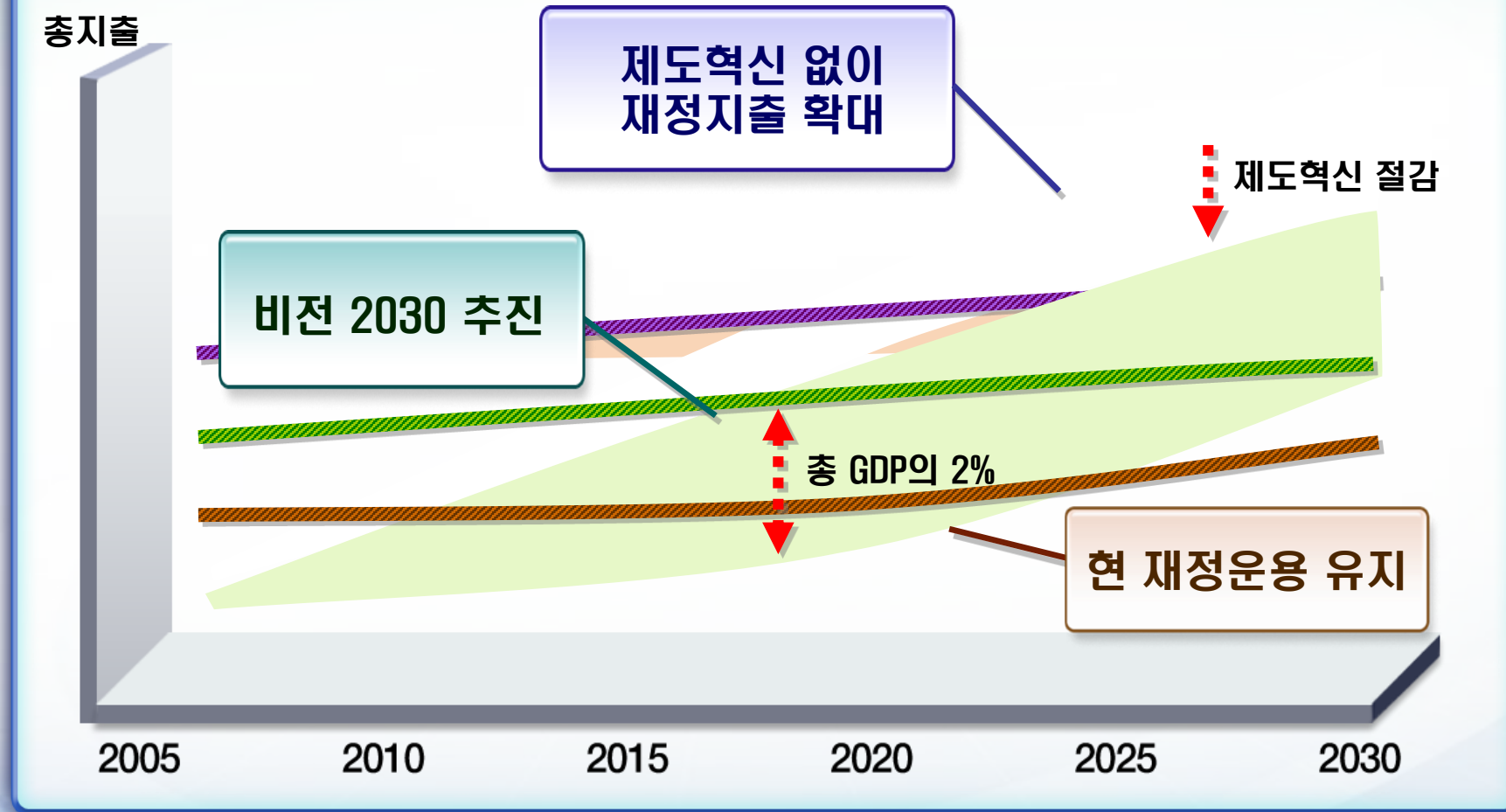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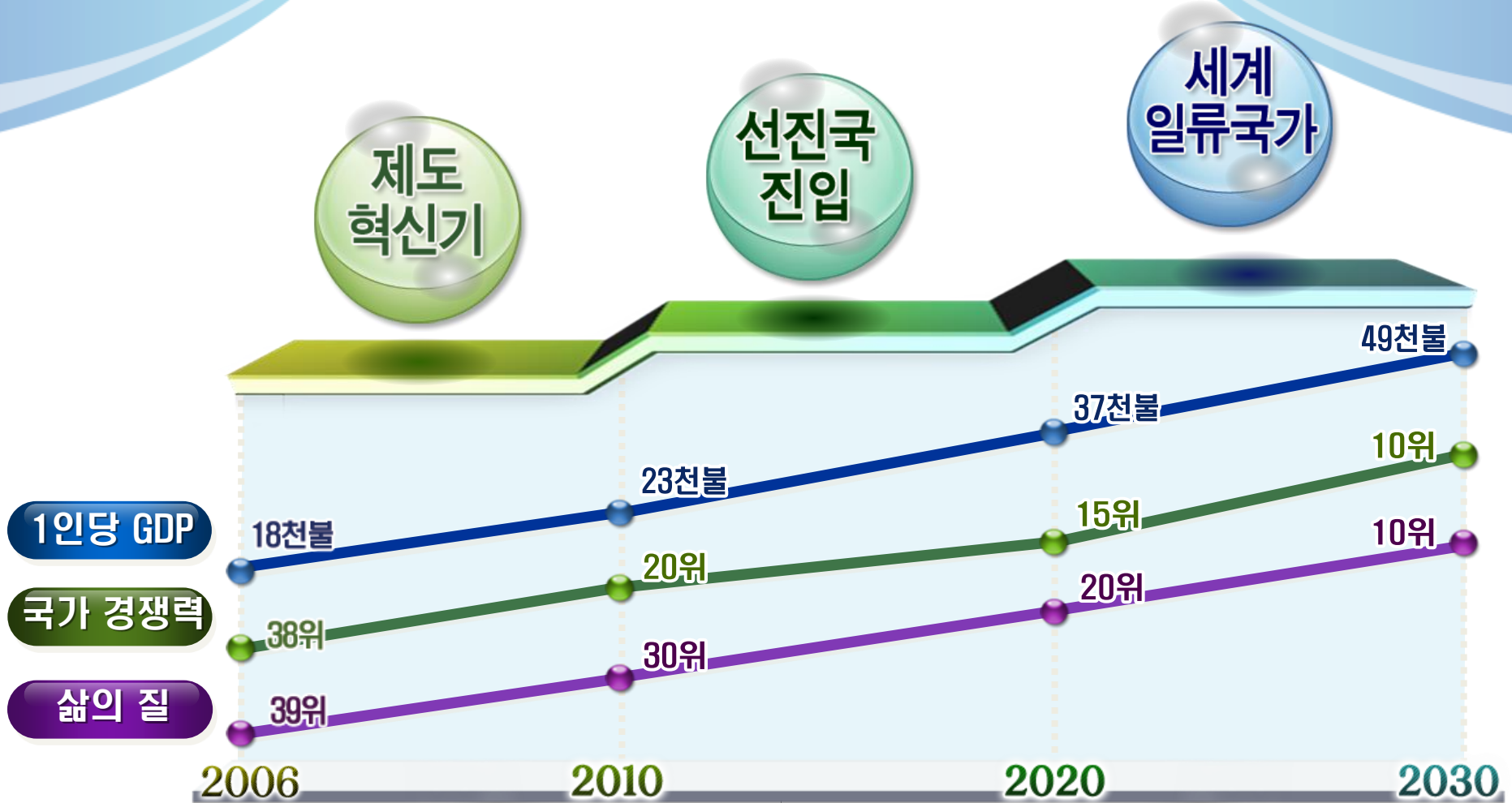
50대 핵심 과제

구분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충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R & 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 · 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 · 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능동적 세계화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력정책 마련 동북아 금융 · 물류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규모 확대 통일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 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의료급여제도 개편 비정규직 대책 사회보험 적용 · 징수체계 효율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영세자영업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활동 확대 보육 서비스 확대 식품안전 보장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 추진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쾌적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농어촌 활력증진
사회적 자본 확충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법제도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개혁 전자정부 구현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비전 추진시 추가소요는 총 GDP의 2% 수준



동반성장을 통한 희망한국 건설



한국경제의 현재

괄목한 만한 발전성과

- 2018년 30/50 (인구 5천만명 - 일인당GDP 3만 달러 이상) 클럽에 도달한 7번째 국가
 - 식민지 경영 경험이 없는 국가 최초
 - 2012년에 '20/50 클럽' 합류
- 90년대말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성공 등 경제 복원력(Resilience) 입증
 - 외형/총량적인 면에서 이러한 선상에서의 진보 (Progress) 지속

그러나 현재 복합적 어려움 봉착

- **4대 도전과제 : 성장, 분배, 사회통합, 삶의 질(well-being)**
 - 저성장 + 고용-소득의 양극화 등 분배문제 심화
 - 체감 **삶의 질** (행복감): 평균소득 3만불 수준 이하로 저조
 - 환경, 여가, 노후불안
 - 사회통합 기반 침식: 사회역동성 저하, 계층간 갈등 심화
 - 범질서 및 사회성원간 신뢰(**사회적 자본**) 문제
 - +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 **구조적/만성적 문제로의 고착화/악화** 위험 상존
- => 한국경제의 **지속 발전가능성**에 관한 확신 침식


(새로운 중장기 전략 수립 을 요구하는) 비전2030 이후의 주요 사건

국내

- 저성장-양극화의 고착화 조짐
- 국토균형발전 drive: 행정수도 이전 등
- 촛불혁명: 시민참여 욕구 발현
- 한반도 평화제체 및 신경제권 논의 급진전

해외

-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 성장둔화 - 분배악화 국면 전개
 -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대두
- 중국의 성숙과 글로벌 부상
- 기술 폭발: 4차산업혁명 발흥단계
- **경제의 정치화 (신보호주의 등)**

- 
- 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전략의 전면적 재검토/재설정 필요
 -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통상적인 위기관리/대응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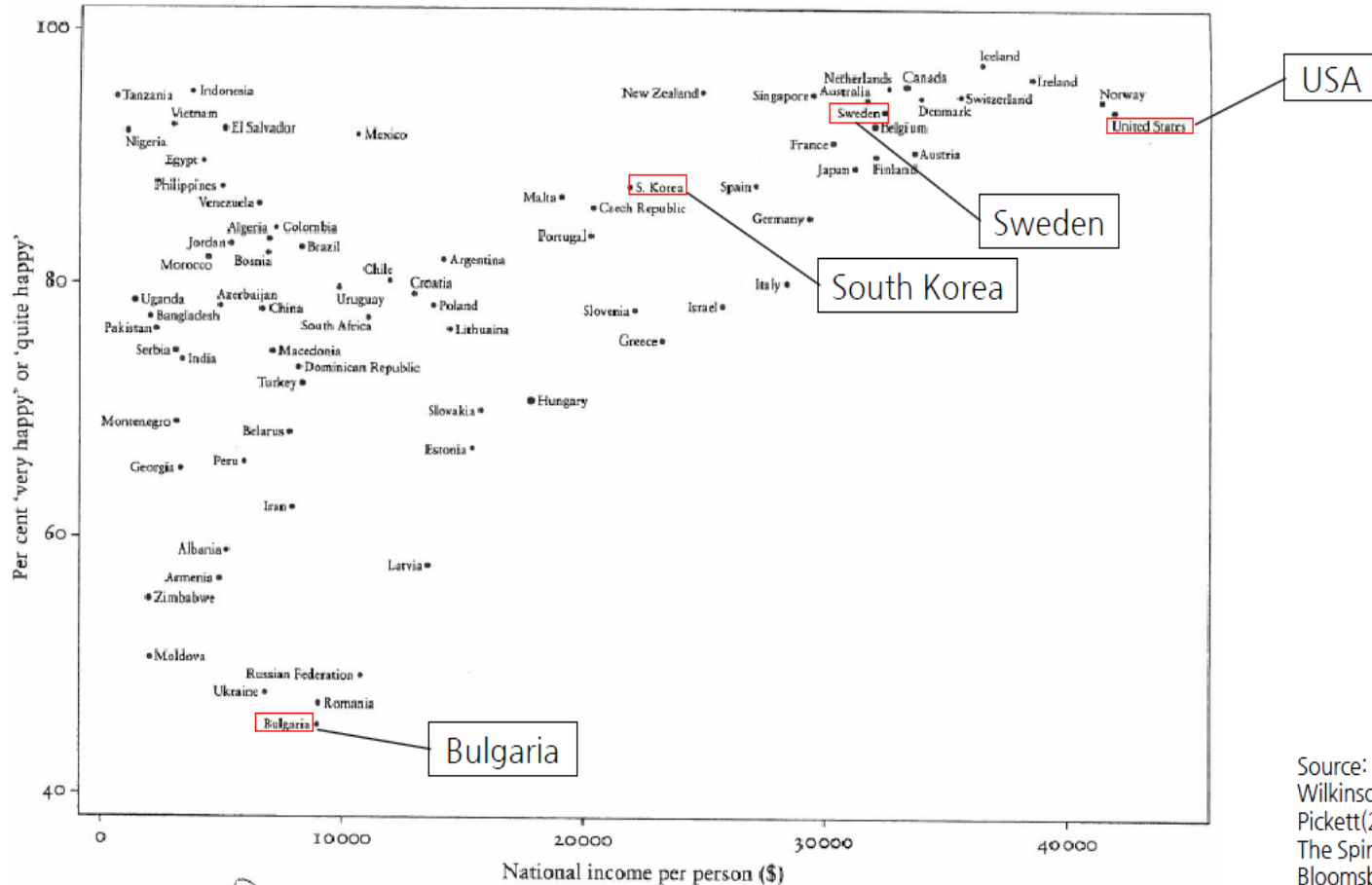
(참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경제의 정치화: was it unpredictable?

- 세계화라는 흐름과 함께 범세계적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적응역량 격차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 금융자본의 국가 간 유출입이 점차 대규모화되고 신속화됨으로써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불균형이 별도의 여과과정 없이 여타 지역으로 순식간에 이전되는 공조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 금융 불안정성** 또한 증대되었다.
- **세계 경제의 장기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의 누적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및 환율과 관련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국제 정책공조체제의 위협**, 장기적으로 **국제경제체제 변환** 등 **세계경제질서의 심각한 조정국면이 초래될 위험성**도 있다.

우천식 외(2007),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KDI (PP46-48)

경제수준에 못 미치는 삶의 질 : 무엇/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1인당 소득과 행복도 국제비교



삶의 질 - 글로벌 (중)하위권

- (OECD) BLI: 27/36
- (Gallop) Global Well-being Index: 117/145
- (NEF) Happy Planet Index: 63/151
- IMD: 40/61
- * (UNDP) HDI: 15/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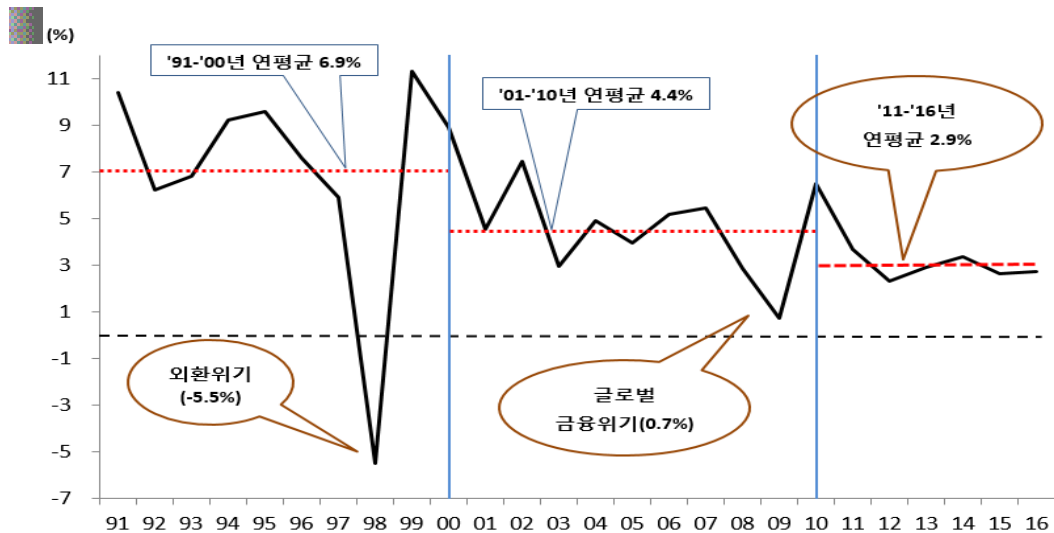
Source: Richard Wilkinson & Kate Pickett(2009). The Spirit Level. Bloomsbury Press.

Cf. Easterlin's Parad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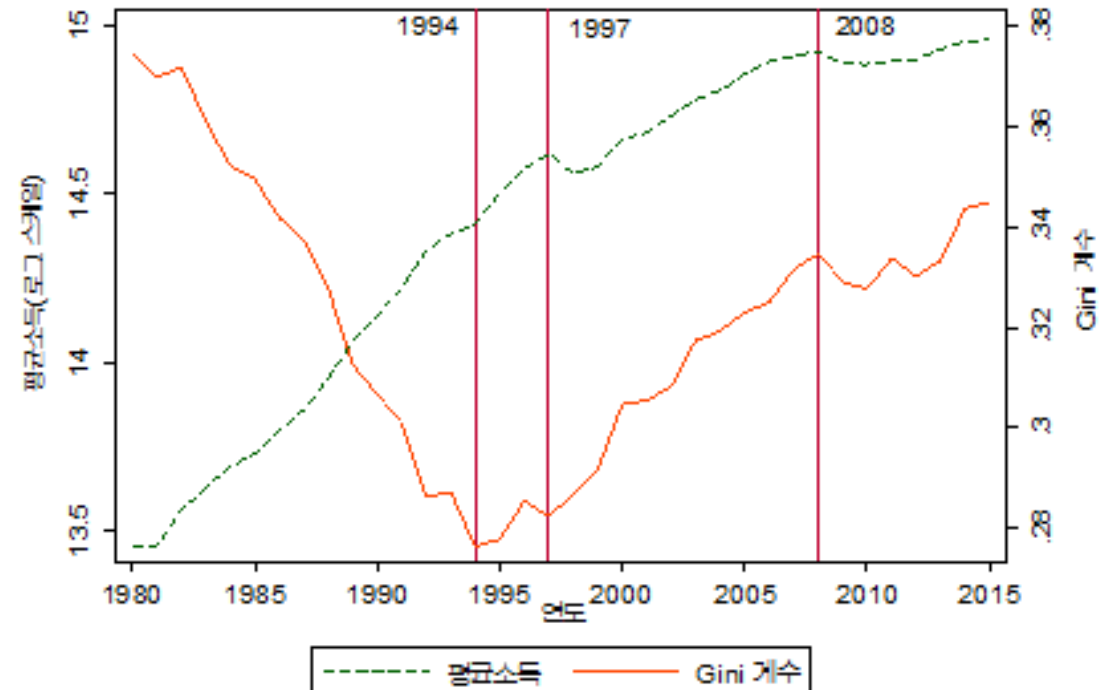
“저성장 - 양극화” 심화: 예상보다 빠른 전개, 고착화 위험 국면

- ◆ (90년대 중반) **형평적 고성장** ⇒ “저성장속의 양극화”로 국면전환 ⇒ 지속/심화, 고착화
 - **성장급락** ('95년 이후 연 0.26%p) + 전방위적, 개체적 양극화 (<= 과거 유형적·부문별 양극화)

성장위기



분배위기



[참고] 성장과 분배 등에 관한 **글로벌 추세** (Global Stylized Facts)

생산성 역설 (Productivity Paradox)

① 기술 진보 + 혁신 가속화

- Global innovation frontier의 지속적 확장

② 그러나 **생산성 하락/정체** (거의 모든 국가)

- 노동생산성 하락
← 유형자본투자 침체 + TFP 감소
- 선도(frontier)기업과 여타기업간 **격차 확대**
 - 생산성 증대 성과의 범경제적 확산(diffusion) 저조
 - 승자독식 경제 강화 : 혁신의 지대수익(rents) 증가

성장둔화와 불평등심화: twin challenges

③ **성장둔화**

- Catch-up dynamics의 후퇴/종료 : 혁신선도국인 미국에 대한 여타국의 생산성 격차 (재)확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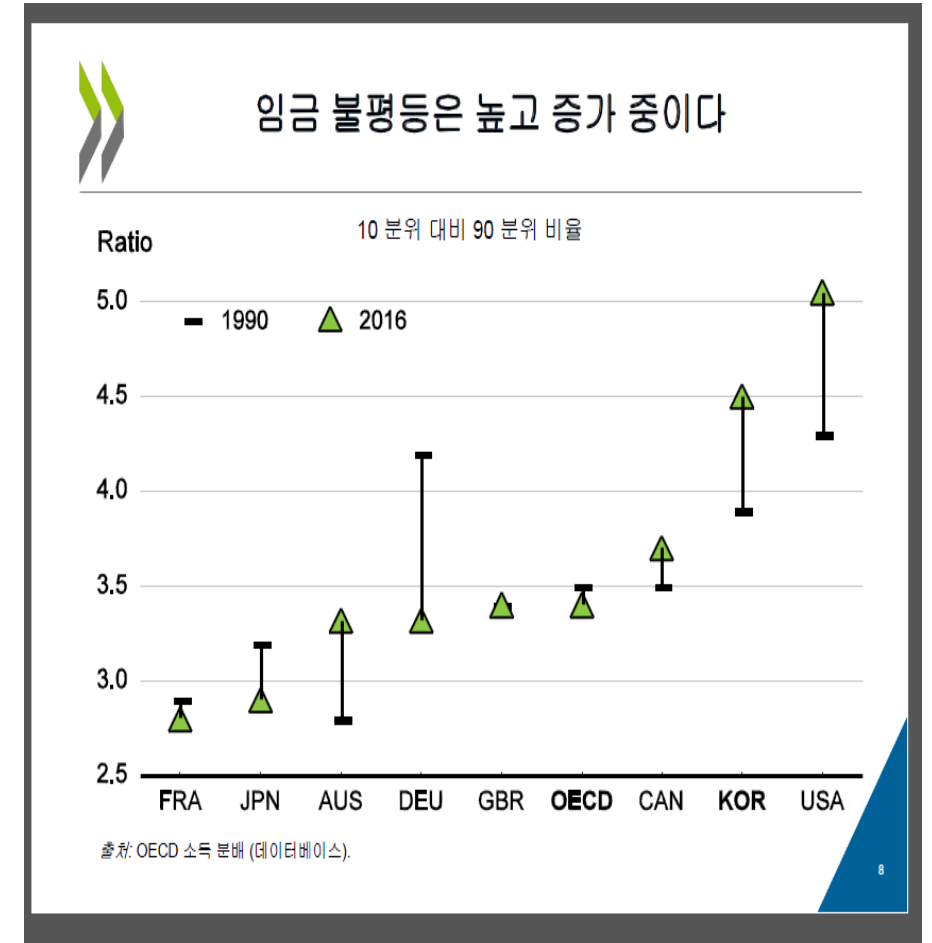
④ **불평등 심화** – 소득분배, 삶의 질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자본소득 비중 증가 + 임금소득 격차 확대
 -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세계화, 노동시장제도 변화 등이 주 원인
- 재정(재분배정책)의 불평등 완화 기능 약화

* Perfect environments for nationalism, neo-mercantilism “개인 + 국가차원의 각자도생주의”, “모두가 흔들리는 시대 ”

격차/불평등 문제 :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 - **균열 사회 양상**

- **수직적 (Vertical)** : 근로소득(earnings) 불평등
 - 5/10분위 계수, 최하위 (끝에서 2등; 미국 근접) 계속 증가 추세;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 **수평적 (Horizontal)** : 성별, 연령대별 소득 및 고용격차 - 매우 높음
 - **여성/남성** = 0.6 (소득), cf. 저임금일자리, 실업
 - **청년/중년** = 0.77 (소득), 실업률 3배 (반면, 청년의 직능수준은 우월)
- **박탈감 (deprivations)** : 사회전반에 만연
 - 건강문제 (67.5%)
 - 사회관계망(사적지원) 문제 (81%)
 - 대기오염 노출 문제



...보다 험준한 앞날 예상: 광속변화시대에 불안정/교란 요인 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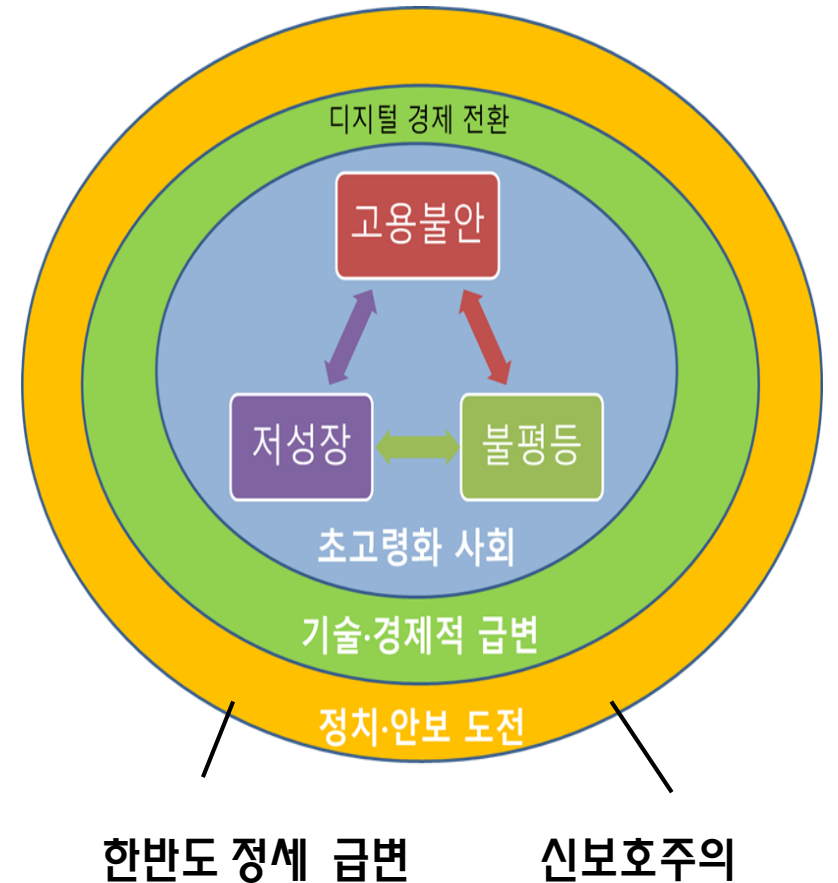
■ 3대 도전과제: 저성장 – 격차(불평등) – 고용불안

+ 3대 거대 비선형적/불연속적 변화
(예상수위/속도 이상의 메가트렌드 변화)

1. 초고령사회 도래 (국내)
2. 중국의 성숙과 글로벌 도약
3. 기술 Big-Bang(4차산업혁명 등)
4. 경제의 정치화 (신보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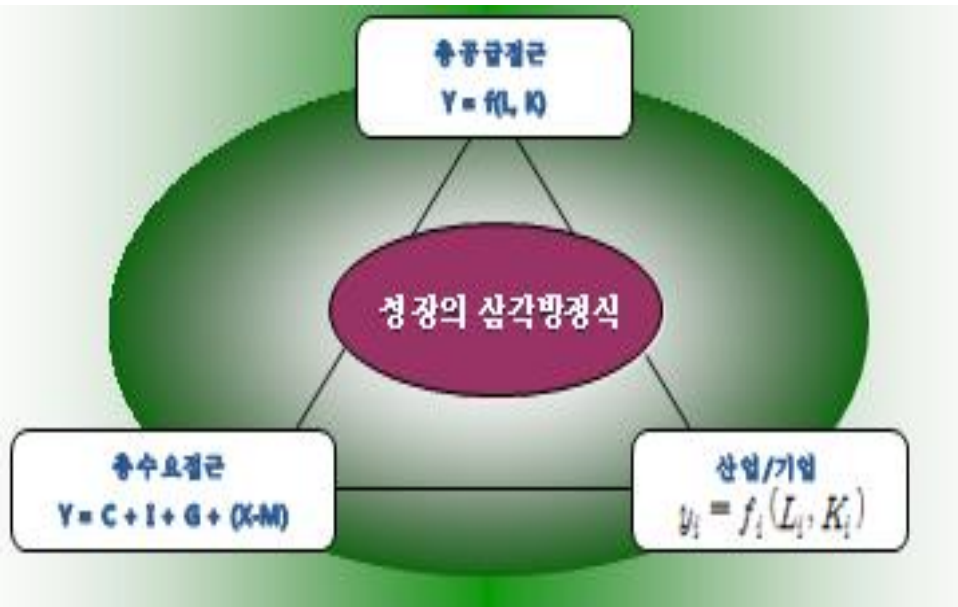
⇒ 기존 문제 + 새로운 문제 ⇒ 대응 부담 증폭 :

압축성장 시대의 잔재가 강한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한계; 내재된 모순/부작용 증폭



경제상황 중단기 종합 전망 (As-is) - 우천식 (2014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발표: 아직도 유효

- 성장의 3각 방정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단기적인 문제해결 전망은 낮음



-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기업경쟁력 향상, 잠재 성장을 회복, 분배 및 고용구조의 개선(경제·산업·고용·소득의 양극화 둔화) 기대 곤란.

- 고용(일자리)의 양, 질, 격차 모든 면에서 전면적 위기 국면 예상

- “저성장속의 양극화[지역·기업·소득 계층간 등]”
⇒ “저성장속의 동반침체” 로의 국면악화 위험성

- 정책적 대응역량에 대한 믿음, 미래희망 희석
⇒ 사회전반 불안/불만 누적



조속한 문제해결의 기대와 이에 근거한 고식적 정책대응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성

• (참고) 성장삼각방정식의 대내 여건 종합 - 열악

총수요

- C, I, G; X-M 모두 근본적 한계
- 가계부채, 건설경기, 설비투자, 해외시장

총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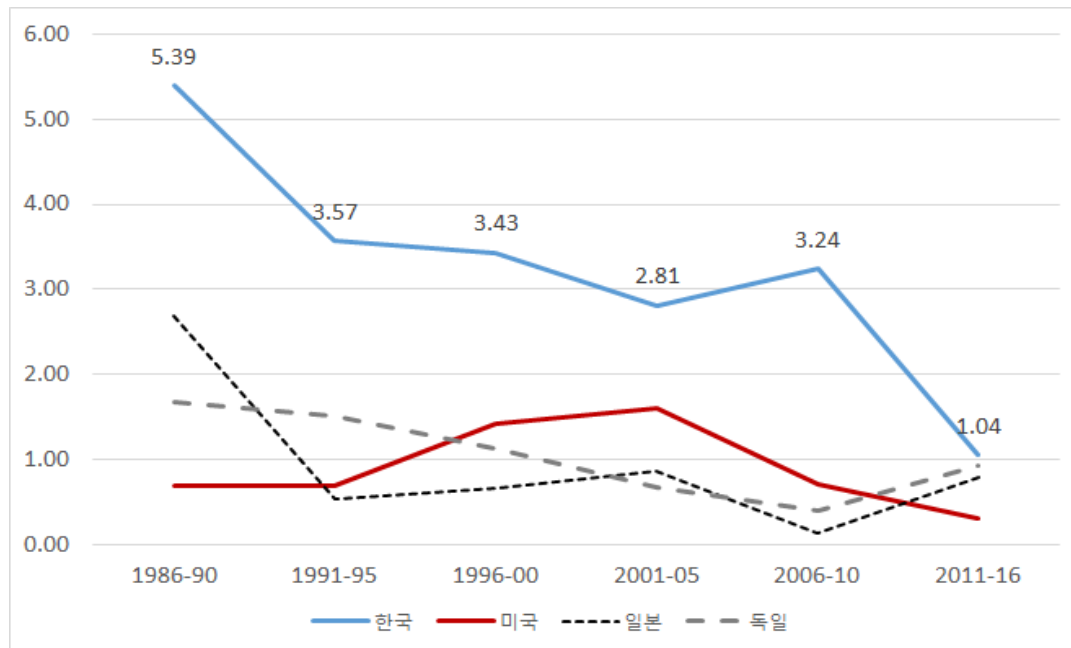
- L, K, T 경제전반
- 기술혁신, 새로운 사업기회, 자본투자, 노동수요/공급

산업/기업

- 주력산업/기업 :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취약/한계
- 혁신형 신산업: PBS, 사업서비스 등 잠재력 뿐; 아직 미약
- 고기술 벤처: 정체상태
- 전통제조업 및 영세자영업: 기본적으로 고용흡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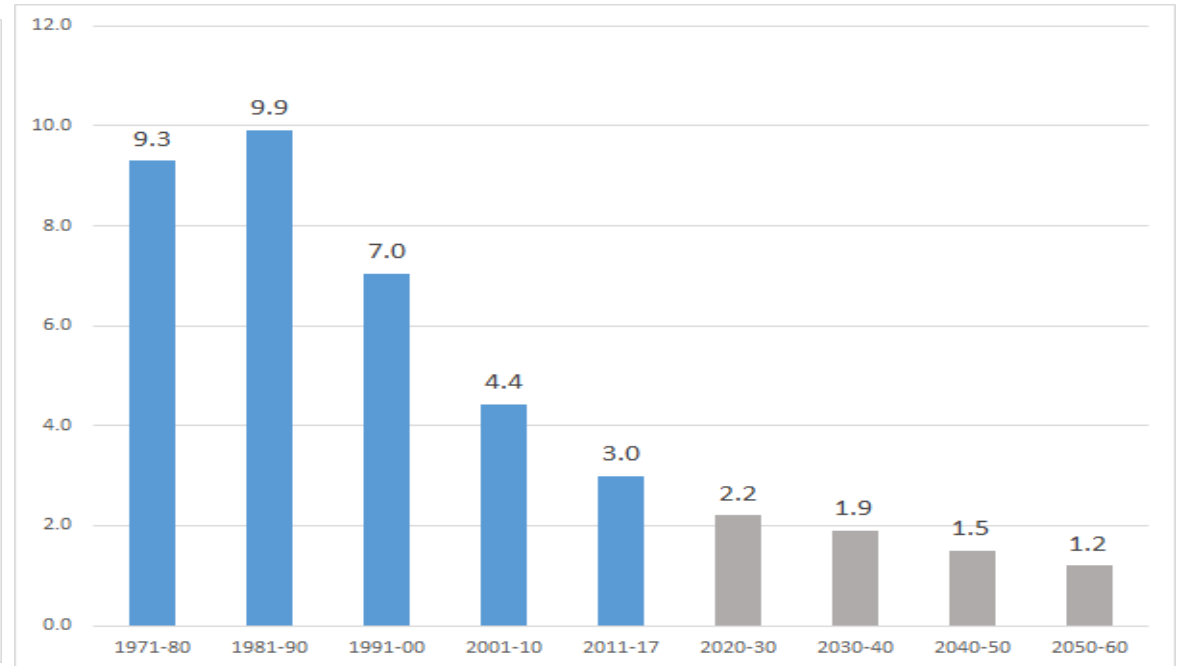
[참고] 한국의 중요소생산성 및 잠재성장을 추이

한국 및 주요국 중요소생산성 추이



자료: OECD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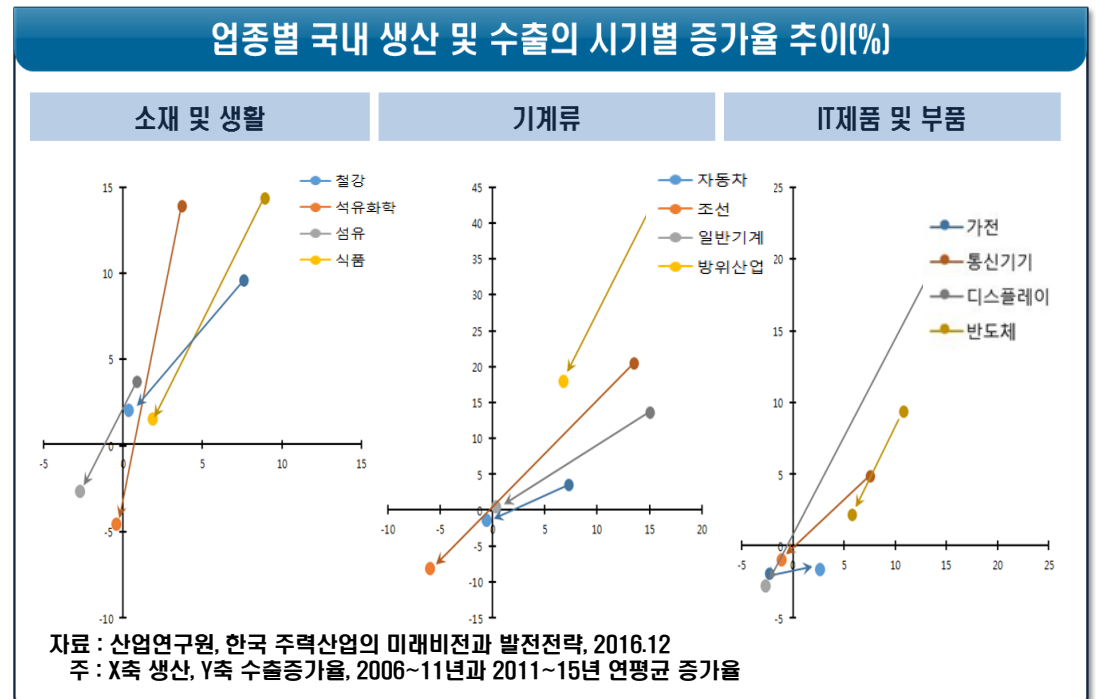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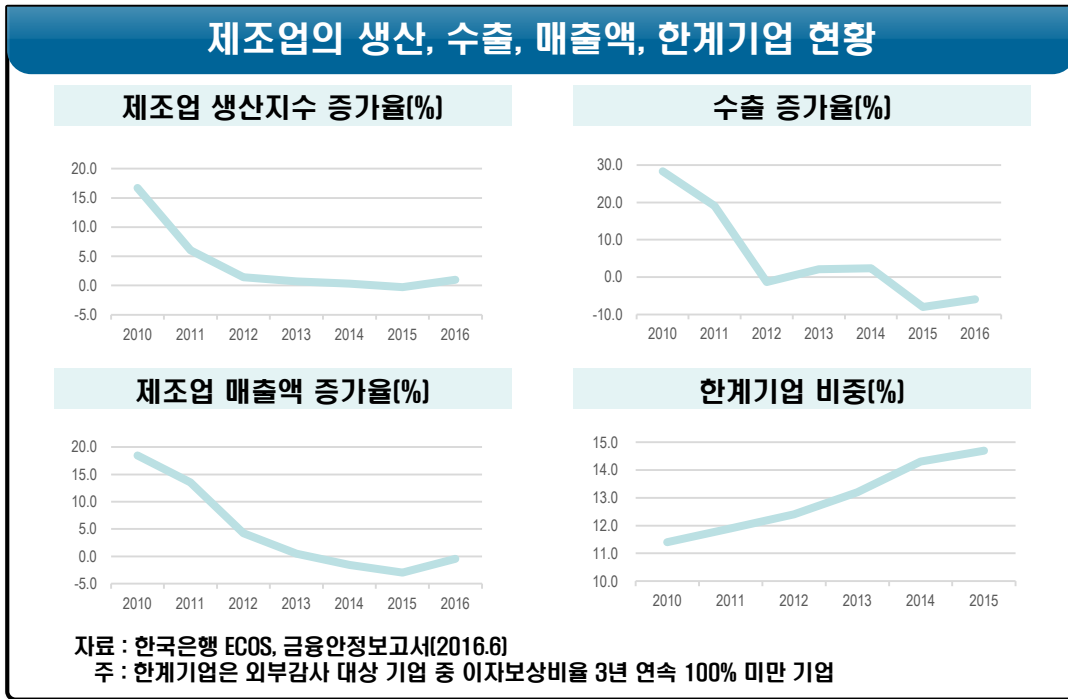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전망(2020-60)



자료: 한국은행 ECOS, IMF(2018)

[참고] 한국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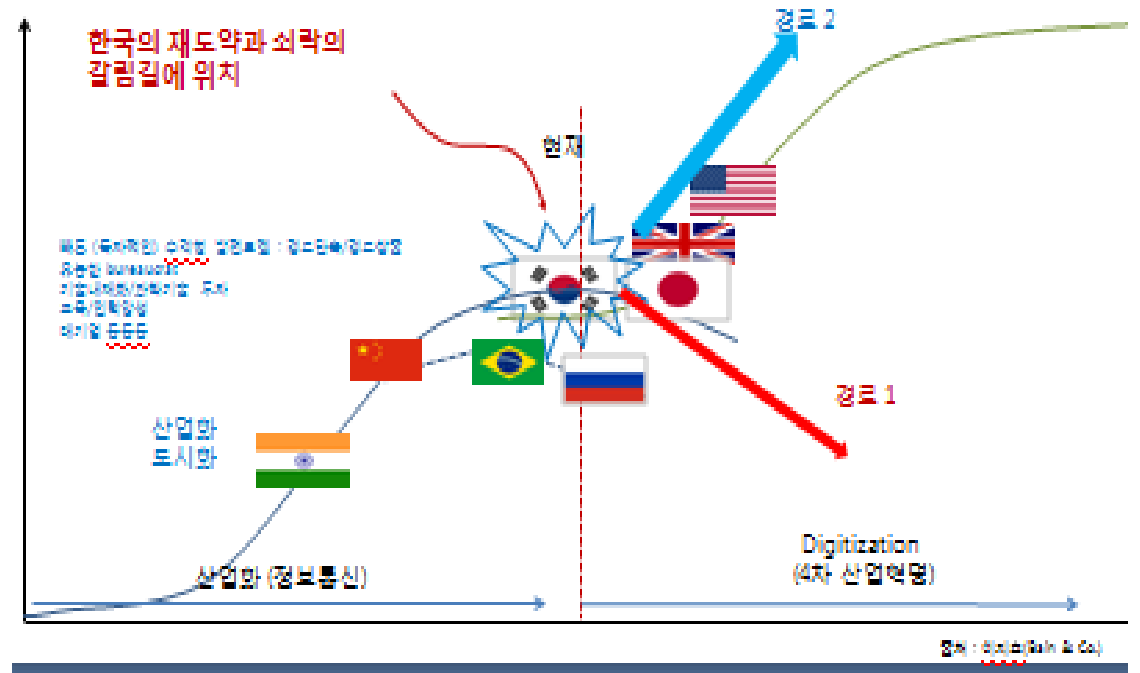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추세적으로 지속(생산, 매출, 수출 둔화, 한계기업 증가)
- 일부 업종이 아닌 첨단기술산업을 포함한 주력업종 전반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편, 기술개발, 구조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과 개별 업종별 전략 마련 필요



자료: 산업연구원(2017)

그러나 아직 열린 미래... 현실적인 증장기전략의 설정이 중요

- 중단기적으로 **위험 요인의 고착화에 대응** +
-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증장기적 국면전환**을 도모
 -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해 어떠한 결정, 선택,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
(Rough, but still **Wide Open Future**)
 - 글로벌 광속변화시대에 있어서 ‘방향과 속도’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음.**



우리 사회의
장기 시나리오
(KAIST)

새로운 **황금시대** (New Golden Age) – 모든 이가 행복한 복지사회, 모두를 존중하는 포용사회
 vs.
 새로운 **암흑시대** (New Dark Age) – 갈등과 분열의 저할력, 고위험사회

패러다임 전환? 기 설정된 패러다임 전환 의 목표와 내용의 보완과 실천이 문제

■ 과거 강조되어 온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개념, 내용은 계속 유효하며 아직 진행형

- ① 정부주도형 경제 ⇒ 선진적 시장경제체제 (민간 자율과 창의)
- ② 요소투입 중심의 “추격형 (Catch-up) 경제” ⇒ “혁신주도형/지식기반 경제”
- ③ 선성장-후복지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동반발전’ 등

■ 그러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완결이 더욱 급박해짐

- 근래의 상황전개를 감안하여 급박한 부분을 중심으로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 +
-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 애로요인**을 타개하는 접근 필요

< 패러다임 전환 내용의 예 (비전 2030) >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 약화
- 사회적 이동성 저하 (패자부활기회의 축소)
- 사회적 갈등 해결 곤란
- 성장율의 급격한 하락 저지 곤란

과거 성공모형의 한계

1. “추격”형 성장모형

- 수입기술(지식)과 물적자본 투자에 의존한 추격형 고도성장
 - 양적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 집중 =>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의 불균형 야기
- 기계적 추격의 여지 소진 + 후발국 추격 격화 + 디지털전환 등으로 그 유효성 급격히 감퇴
 - 위계와 규율,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비용우위 중심의 산업/기업 경쟁력의 한계 => **안정 성장 자체 유지 곤란**



2. “왜곡”된 추격 모형

- 물적 자본 투자 중심 성장 과정에서 **고용 · 교육 ·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상대적으로 경시**
 - 사람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가계의 부담 (시장기능에 과잉 의존; **최소주의 사회정책**)
-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 “성장성과의 가계 환류”, “낙수효과”가 약화 => 왜곡의 부작용 증폭
 - 다수 국민의 삶의 안정성 위협 (고불안/고위험사회)
 -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인적·사회적 기반 약화, 시스템 안정성 저하

선진국 착시현상 경계 필요: 아직도 장시간노동에 의존하는 중/저생산성 국가 위치

<선진국 착시 현상>

일인당소득(PPP) 기준으로
프랑스, 일본, 영국의 10% 수준으로
근접,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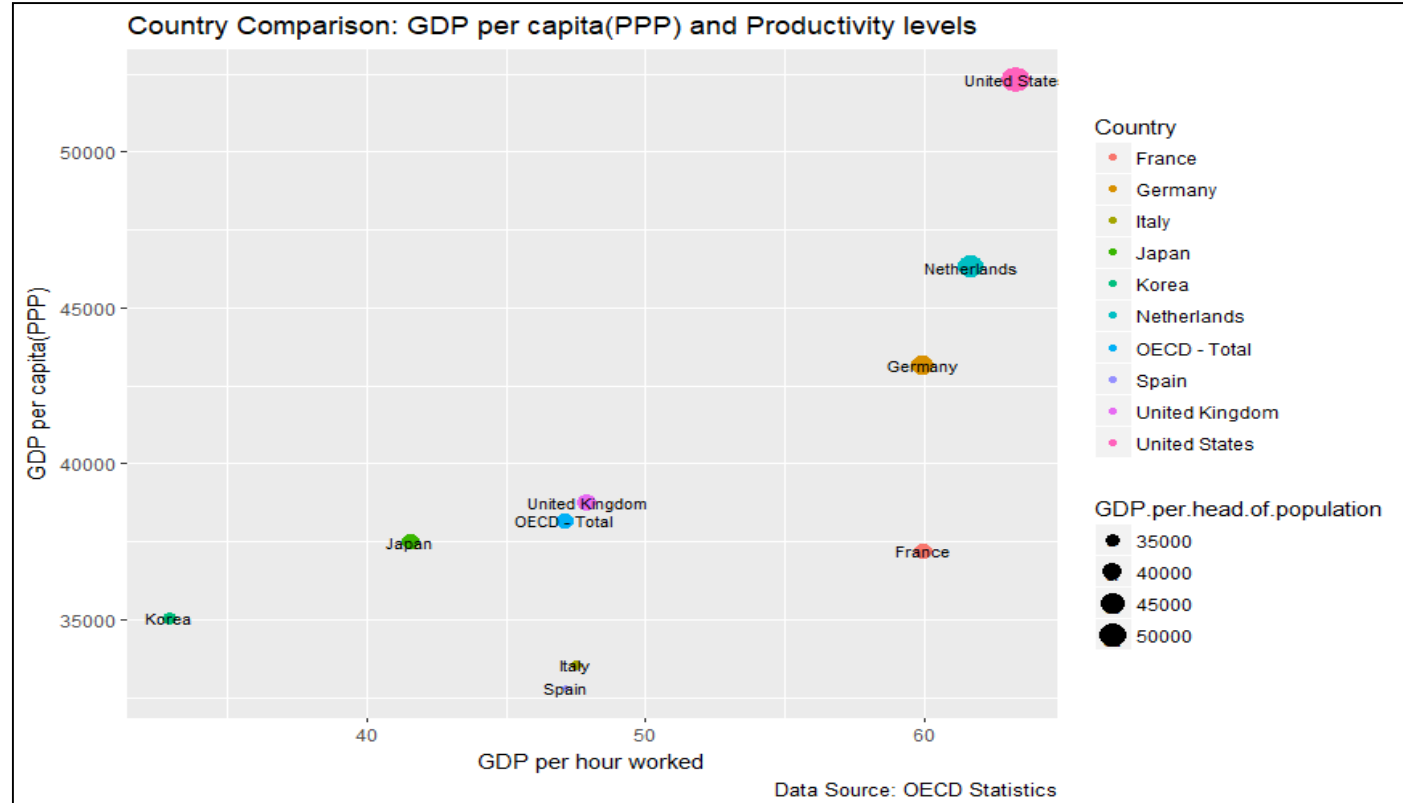
압도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감당한
근로시간당 일인당 소득은
상기 국가들에 비해 20-30% 이상의
격차.

* 무늬만 선진국인 선진국
몸으로 떴우는 중진국형 선진국



✓ **추격 (Catch-up)은 아직 절반의 완성:**

- “근면”, “유형자본투자”에 의존한 “**기계적인 요소주도형 추격**” 과정은 종식되었으나,
- “일하는 방식, 복합적 지식기술자산” 등에 의존한 “**혁신/생산성주도형 추격**”은 아직 진행형이자 향후 절대적인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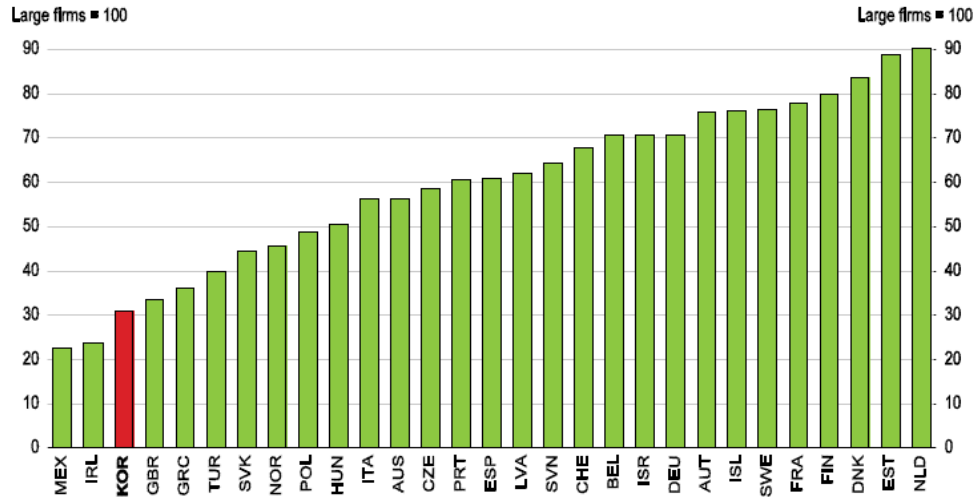


저생산성 경제로서의 핵심 문제부문 : 낙후된 중소기업 및 서비스섹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2014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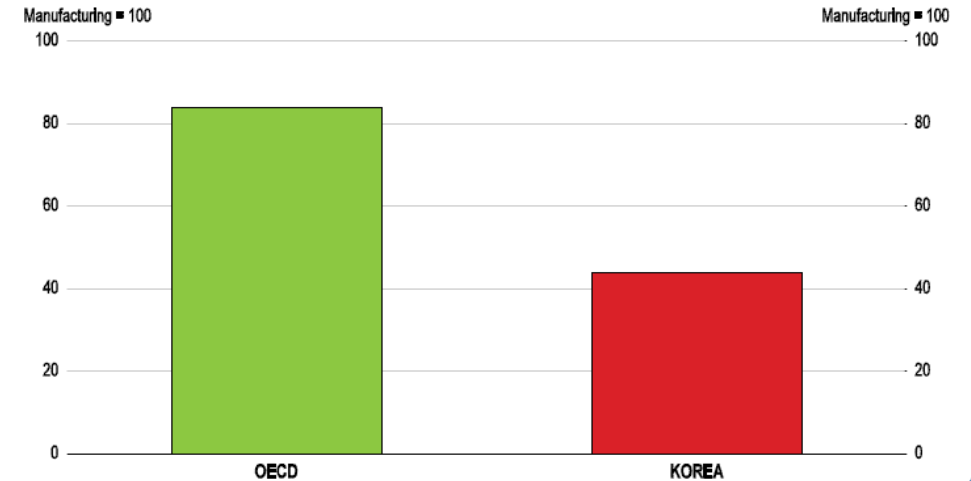
출처: OECD.

27



서비스 생산성이 낮다

제조업 = 100; 2010년 부가가치 가격에 기초한 2017년 가격



출처: OECD 국민 계정 통계 (데이터베이스); OECD 구조 분석 통계 (데이터베이스).

33

- ✓ 고용과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의 “만성적인 저생산성 + 생산성격차 확대” :
 “성장둔화 + 분배악화 + 고용악화 + 낮은 삶의질” 를 관통하는 기저 문제요인이나 중단기간에 해결 불가능

[참고] 왜곡된 추격모형 - 인적기반(사람) 관련 낮은 투자

- ✓ 우리나라의 투자는 OECD 국 중 최하위 수준
- 교육 투자는 OECD 평균 수준이나
- 가족, 실업, 적극적노동시장 (ALMP) 관련 투자는 OECD 중 최하위
 - 교육투자도 가계 과다 부담
- ✓ 기본적으로 인적기반에 대한 저투자 국가
- 인력의 질, 격차, 일상의 불안 문제는 필연적 결과

인적기반(사람) 관련 투자 국제 비교 (OECD) (2000-2013년 평균)



[참고]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 비전2030 당시 (2006)에 비해 10.1% 수준으로 증가(2015); 그러나 아직도 당시 2020년 목표치는 물론 OECD 평균에도 크게 미달

■ 사회복지 체제 전반은 총(지출)투자 규모의 문제뿐 아니라 프로그램간 구성면에서도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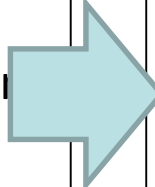
- 사회보험위주, 공공부조 취약
-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등) 취약
- 조세재정구조의 한계 반영

그림 update 필요

사회성원 다수가 추동하는 안정과 활력의 “고혁신” 사회로...

■ 공급, 활용, 환류 면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저혁신”의 뒷 탈피

1. (공급) 혁신역량, 자원, 저변의 협소 -
 - 소수 대기업에 편중 (narrow-based)
 2. (활용) 기존 혁신자원의 저활용(under-utilization)
 - 규제, 비효과적 정책 산재 (정책과잉)
 3. (환류) 혁신의 기회와 과정, 성과 배분의 불공정성
 - 불공정거래, 대기업 시장지배력
 - 성장 성과의 가계환류 저조
 - * 이윤(기업)-노동(가계)의 양극화
 - 기본생활 보장 등 혁신의 사회안전망 취약
- => 혁신에 대한 저항 (낮은 사회적 수용성)



■ “공급”상의 문제보다는 “활용”과 “환류”상의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접근

- 사회적 개인 능력 부족보다는 “집합적” “사회적” 역량 창출의 문제
- ## ■ 그간의 이행성과, 축적자산을 바탕으로 하되,
1. 누적된 왜곡요인 (불공정 배분 및 이로 인한 가계 유효수요의 부족 등)의 교정
 2. 물적자본이 아닌 사람에게 대한 보다 과감한 사회적 투자 선택과 결정
 3.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재구축
- => 사회 성원 다수가 참여하여 우리사회 전체의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공유하는 “포용적 혁신사회”로의 전환이 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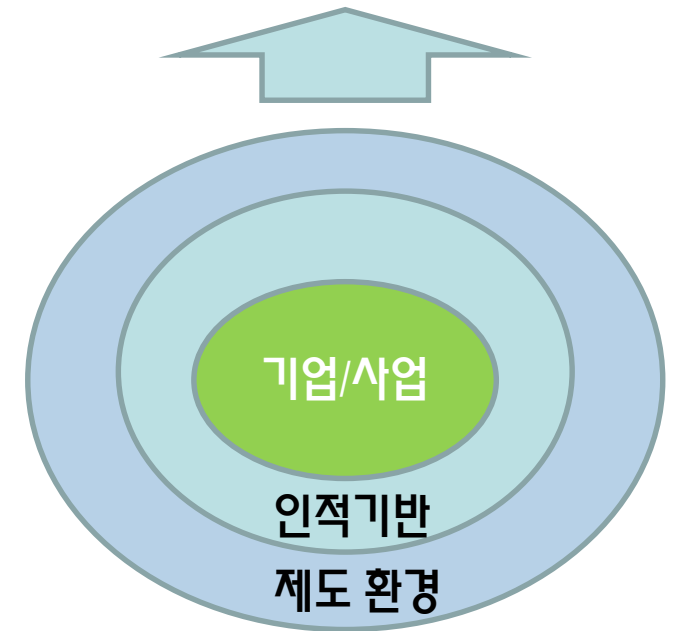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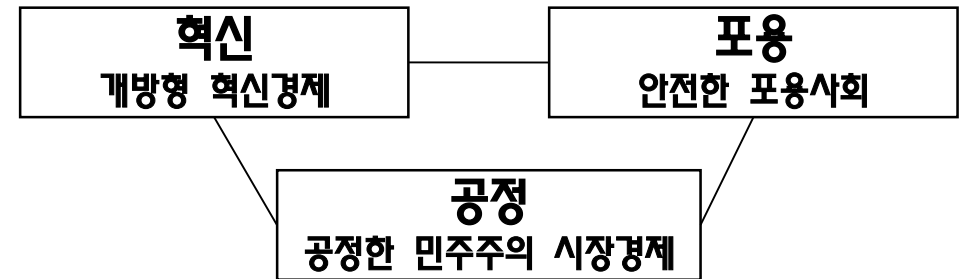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 목표 및 전환을 위한 정책 축

- “혁신”과 “공정”, “포용”을 3대 목표 축으로 하여

안정적 성장 속에,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향유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

- 전환 (Transformation)을 위한 3대 정책과제의 축

- **경제활동 일선(Business)** : 기업/산업현장의 혁신 극대화
 - 공정경쟁질서, 규제혁신, 지역혁신거점 등
- **인적기반(Human-base)**: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적기반 일대 재정비
 - 인적자원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기본적인 삶의 위협 해소
- **제도환경(Institutions)**: 혁신 촉발의 조직·제도적 환경
 - 노동시장, 교육인력, 기업, R&D, 복지, 대외통상 등 주요 부문 일체 +
조세재정, 지방분권, 갈등조정기제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3대 전환 과제 >

넘어서야 할 통념들...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

■ 지난 10년/15년/20년

- 잃어버린 00년 (도돌이표) ⇒ 학습과 축적의 시간

■ 문제의 원인

- 정책(/인식)실패 ⇒ 대내외 복합적 (메가트렌드)

■ 중장기 잠재성장율

- 지속 추락 불가피 (결정론) ⇒ 하기 나름, 2020~30년대 2%대 가능

■ 발전단계

- 혁신주도형 경제 (창조경제) 진입 => 소수 글로벌 기업 약진에 따른 “착시” 경계, 아직 “근접기”

■ 인력 수준

- 인력강국 ⇒ 점차 인력 취약국으로?
 - PIACC 결과: 성인 문해력 OECD 평균 이하

● 기술

- R&D 강국? 킥효과, 혁신과의 부정합

■ 정책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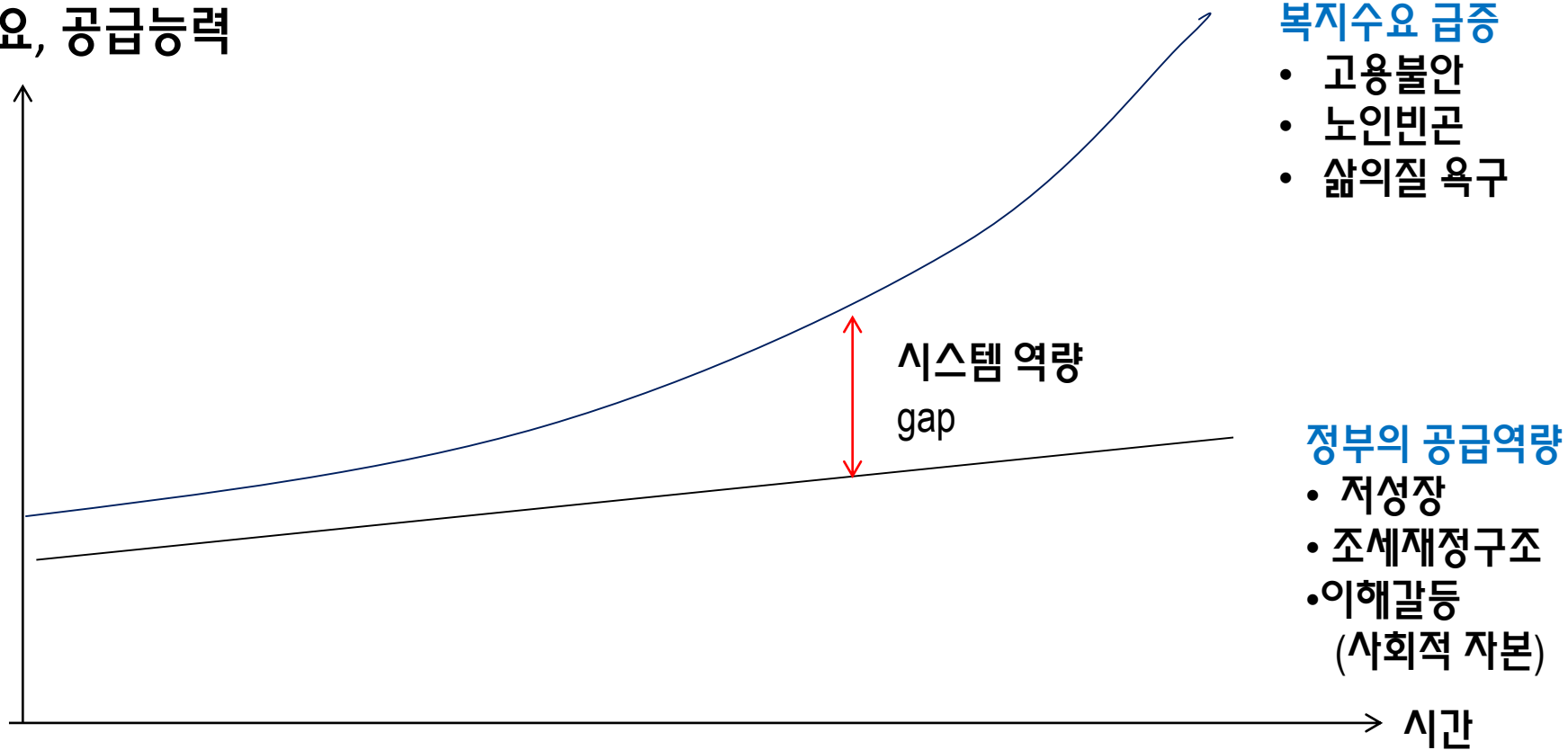
- 추가적 “묘책” 강구 ⇒ 정책과잉 상태 해소 (consolidation), 일하는 방식 변화

■ 정부의 역할

- 작은 정부 ⇒ 왜곡의 적극 교정, 전략적 재정, 중앙-지역정부의 역할 재설정 (파트너십)

포용적 성장 실천의 현실적인 장애요인

복지수요, 공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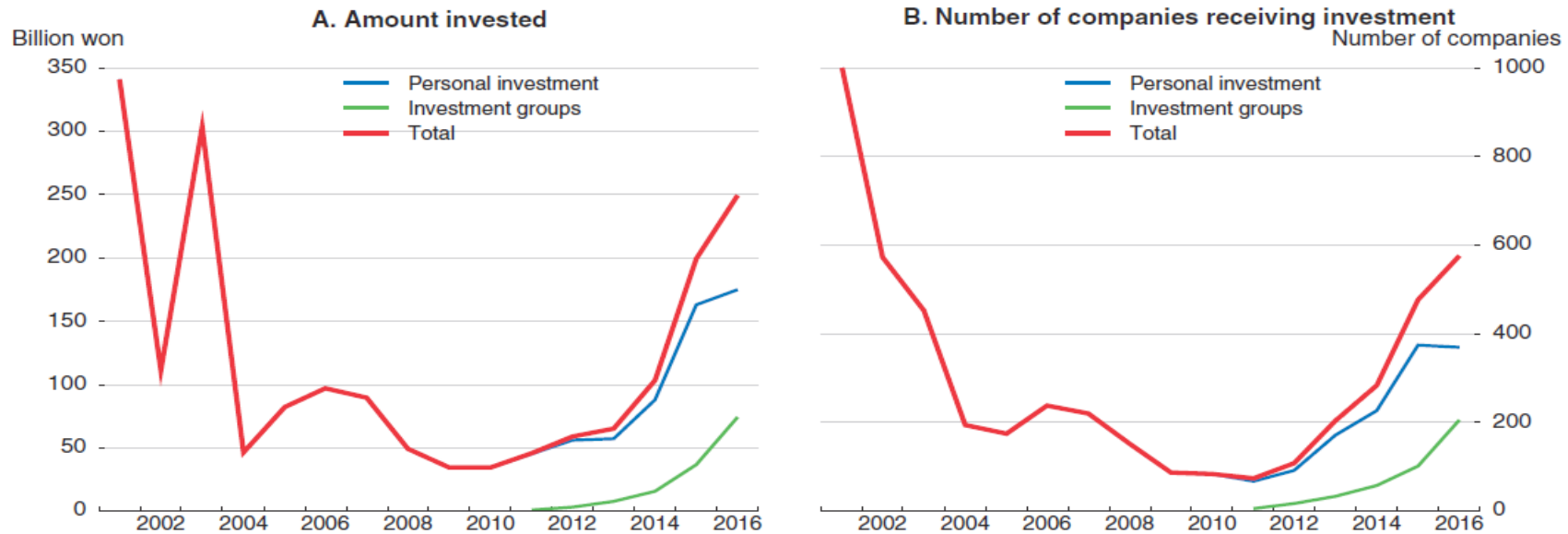


- ✓ 시스템 역량의 gap 증폭 예상:
대응 전략: 공급측면 정책 + 수요측면 정책


새로운 발전전략 실천의 기반(자산) 요인 - 혁신 경쟁력

- 우리의 산업/기업은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보유
-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고용창출의 핵심이라 할 **new business dynamism**에 있어서 근래에 새로운 발전적 추세 관측

Figure 2.26. Investment by angel investors has rebounded but remains below earlier pea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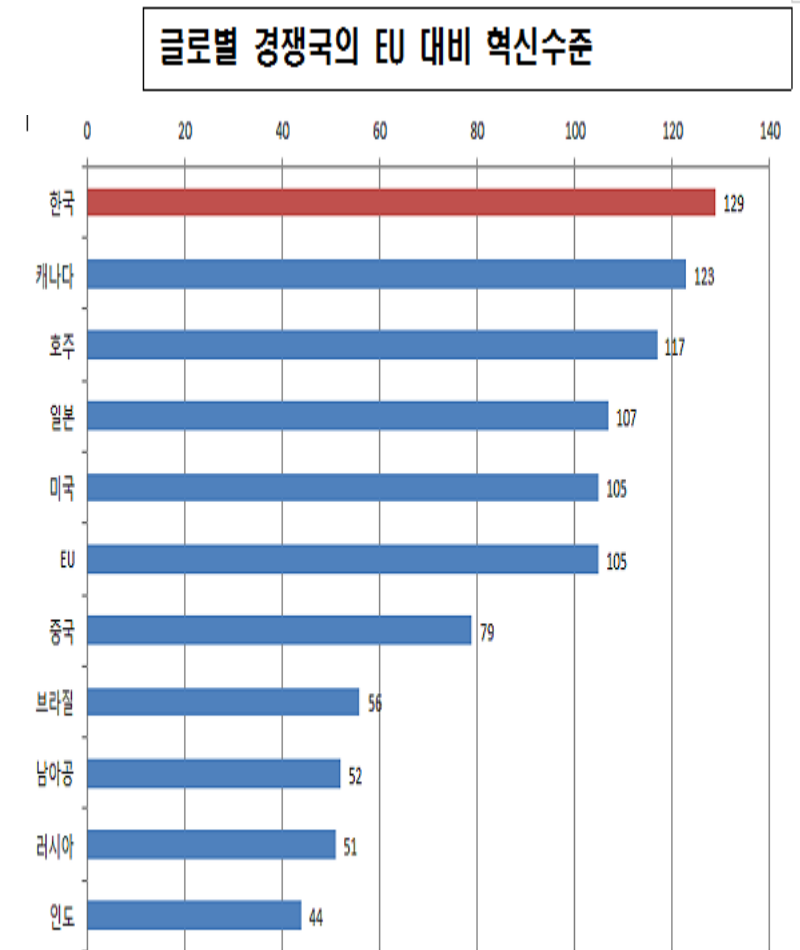


Sourc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7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739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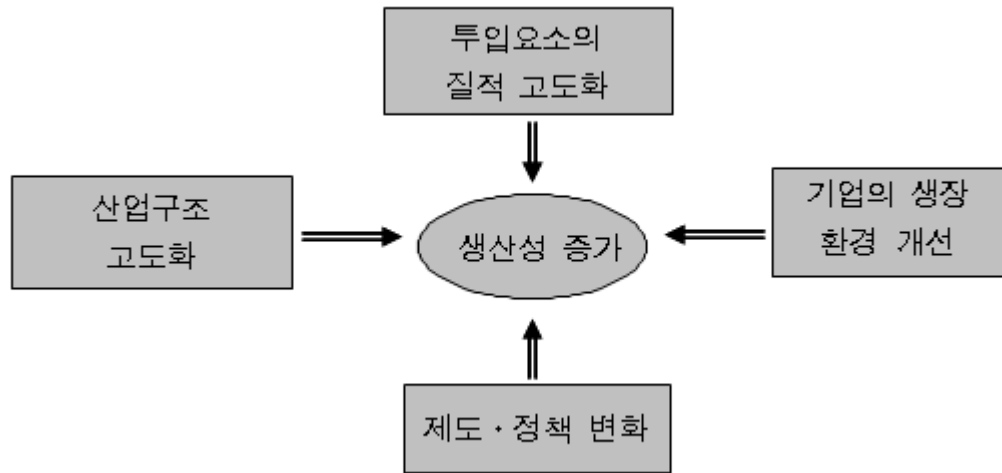
[참고]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국제비교 평가

- Bloomberg 혁신지수: 4년 연속 1위
- KISTEP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5위
- EU의 주요국 혁신역량 평가: 6년 연속 1위
 - EU,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 제조업 경쟁력 지수
 - UNDP: 4위/142개국 (2012)
 - 독일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 등의 순위
 - Deloitte & Council on Competitiveness : 5위/40개국 (2016)
 - 중국 > 미국 > 독일 > 일본 > 한국 > 영국 > 대만 등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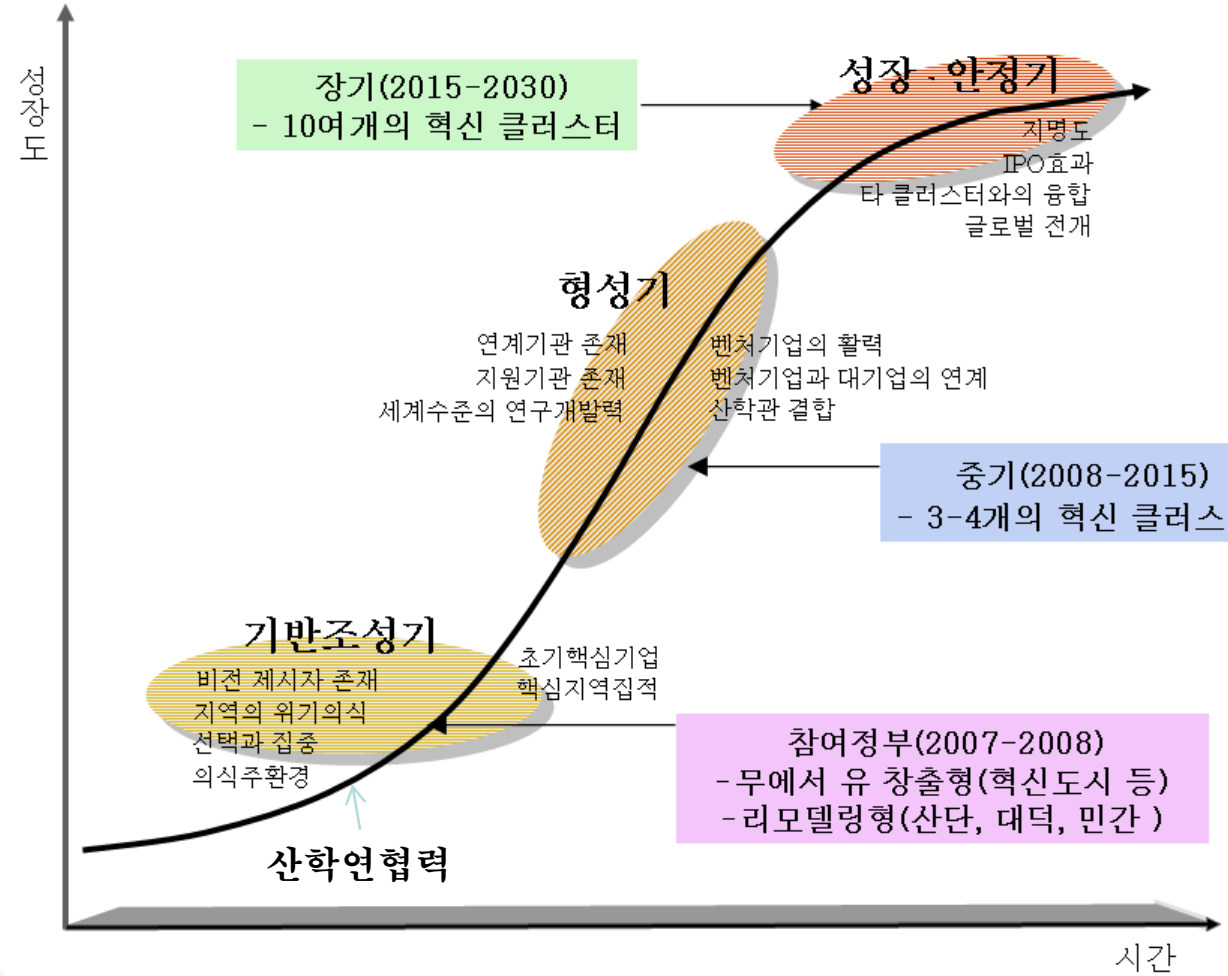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축적의 시간 ⇒ 도약의 시간

혁신기반형 경제의 개념도



혁신클러스터 발전의 S-curve



(참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은 왜 어려운가?

- 최근 5년간 4~5%대의 성장 실적에 직면하여, 몇몇 제도적.정책적 문제요인만 해소하면 다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주세를 회복하여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 요소투입형이 아닌 혁신주도형 경제, 생산성 주도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인식되었고 실제 여러 정부의 주요한 지향점이 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아직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근래에 경제.사회적 격차 확대를 수반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자원의 새로운 창출.결합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식.관행,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사회 시스템**을 요구하며, 이러한 전환에는 상당 기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사회 전체의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우천식 외(2007), KDI

* 혁신의 3대요소 = 개인역량 + 조직역량 + 제도환경

인적자원은 여전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자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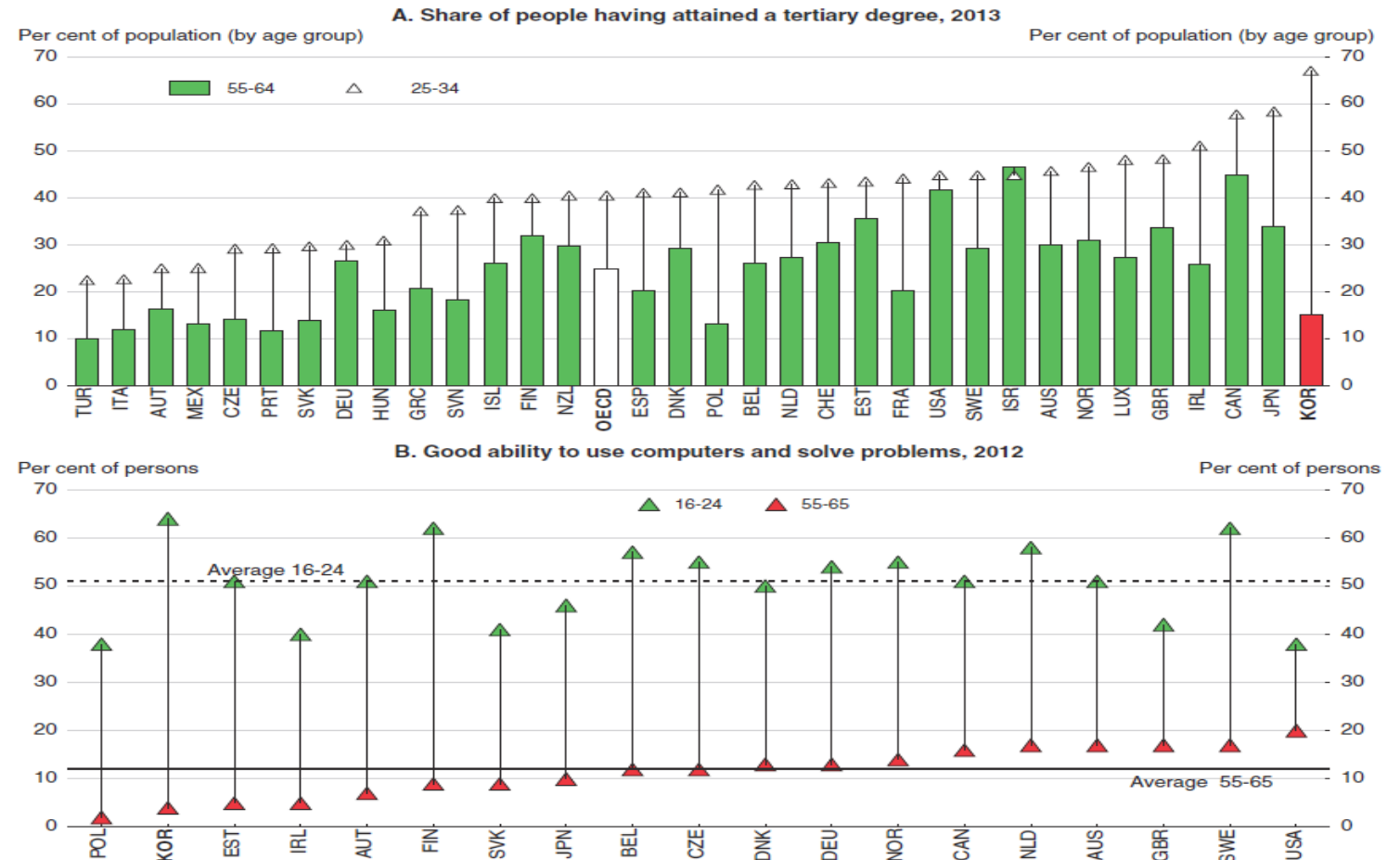
■ 교육기반, 자기실현욕구, 사회참여 욕구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

- 글로벌 선도인력은 부족하나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중-고급 인력의 공급기반은 매우 양호

- 특히 청년층은 **네트워크 기반형 글로벌두뇌강국**으로 우리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보유

■ “총체적 학습사회” 형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이를 위한 정책적 전기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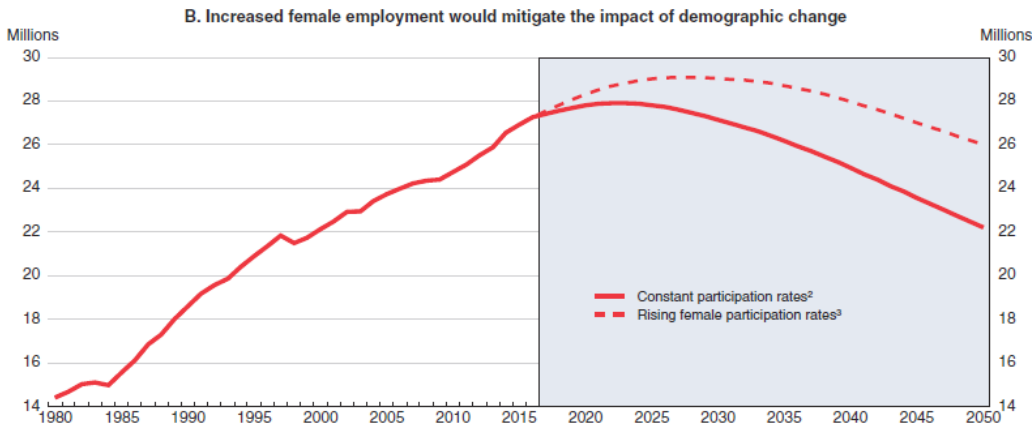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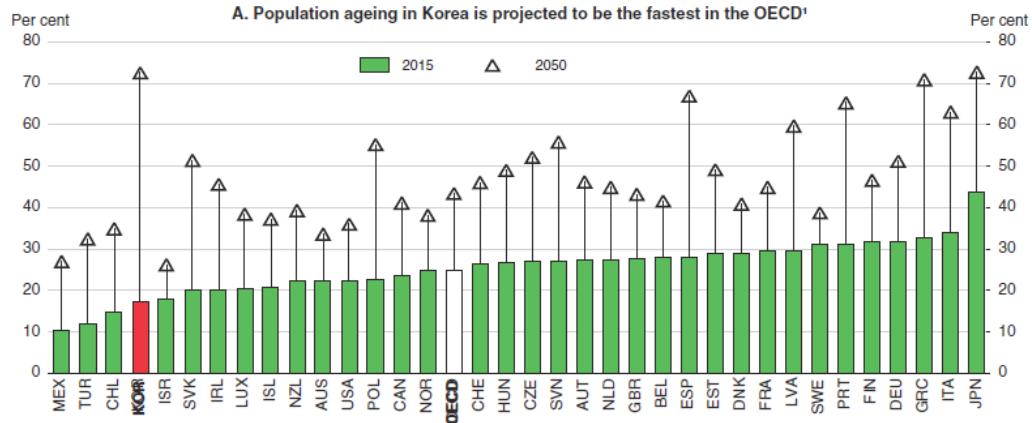
Figure 28. The education and skill gap between younger and older workers is large in Korea



Source: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OECD (2013b).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증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과제

Figure 24. Korea's population ageing will be the fastest in the OECD, leading to a shrinking labour forc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s a per cent of the population aged 15 to 64.
 The participation rates for men and women are assumed to remain at their current levels for each age group.
 Female participation rates are assumed to reach current male rates in each age group by 2050.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 for Korea (2015)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OECD calculations.

■ 예를 들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 여성인력의 노동참여율 제고
- 초기 고령인구의 경제 및 준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해외인력 활용
- 노동의 질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충 효과 가능

❖ 문제의 관건은 가용 노동력을 최대한 수용,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수요의 창출 능력임.

핵심 쟁점 / 천착 과제

사회적 선택상의 난제

-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규제개혁 vs. 재분배 효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새로운 포용적 복지모형을 위한 재원조달: 조세개정개혁 문제
 - 비전2030의 미완/미결과제
- 내수-수출, 가계-기업간 불균형 교정을 위한 거시경제 운용의 틀: 포스트케인지안 접근

Game Changers

- 국가지배구조: 지방분권 혁신
 - 시민사회 – 지방 – 중앙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 한반도신경제 (평화경제) 효과와 새로운 유효수요의 창출

1. 전략적 도약: 융합프로젝트(Flagship Projects) 추진

“구슬 꿰기(충분한 구슬 – not 기계적 but 융합적 재결합)”

■ 창조적 혁신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 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부문별 추진과제에 더하여 부처/부문 간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융합형 관통프로젝트**” 가 필요

요건

- 기존 정책간 시너지 창출 + 이를 통해 각 정책의 추동력 강화
 - 기존 프로그램 + Triggering 요소(factor) 가미
- 주어진 시한내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국민경제적 성과 창출
 - 국정 4대 도전과제(성장, 고용, 분배, 삶의 질)에 관한 가시적 성과
 - 괄목할만한 ‘**성공사례/모형**’ 창출 => 전사회적(societal) 학습 모멘텀 형성 => 성공모형의 확산 가속, **대세화 (박세리 모형)**
- 커다란 비용 (재정적, 제도적, 정치사회적) 없이 실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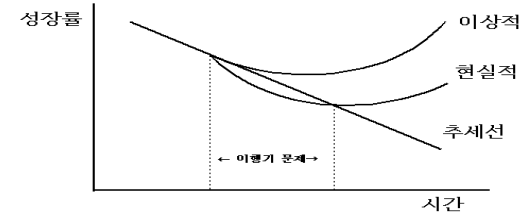
■ 융합프로젝트의 예?

- 국민생활 속의 평생학습 (2013.8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내용)
- 국토 공간재조성 사업: Re-create Korea – 주거공간, 생활문화공간
- 융복합형 해외진출/교류 (Whole-of-Korea Package)

>> National Flagship Project

- ✓ 예상되는 ‘심층적 제도/구조개혁’의 부작용(J-curve 효과*)에 대응하고,
- ✓ 중단기적으로 민생경제/사회문제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
- ✓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경쟁력 강화에 기여
- ✓ 기본적으로 총공급(AS)와 총수요(AD) 커브의 동시 확대: Non-inflationary [sustainable]

* [제도개혁의 J-커브효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기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적응/조정 비용’ 제도 변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비용’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인 제도개혁이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게 되는 효과



- ❖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융합 project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 (정부내 및 학계 모두),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도 않았음.
- ❖ 2013년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보완과제” 보고 과정에서 그 개념과 일부 과제가 소개; 그러나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 지역화·분권화의 완성

- 중앙정부 주도 **국가일체형 발전모형**의 한계
 - 중앙집권형(전제왕조형) 수직적 국가지배구조의 전통
 - 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지역화·분권화 성과; 그러나 중앙 – 광역-기초의 수직적 구도가 지배적
 - 산업화시대/개발년대 동안 유용 => 점차 “질곡” 요인으로 작용
 - 지역역량 성숙; 국가행정지도 변화 (일부 기초권의 급성장)
 - “경직”, “획일”, “통제” <=> 유연, 다양, 창의, 위험분산
 - 중앙주도의 ‘지역’ 사업(산업, 인력, 혁신 등)의 난립 양상
- 지역주도형 **다원적 발전모형**의 획기적 보강 필요 (**광역 및 기초**)
 - 단순한 행·재정 권한의 위임/이양을 넘어선 법제도, 정책기획에 이르는 본질적 분권화·지역화
 - 명실상부한 중앙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역/지자체의 역할 정립
 - **융합형프로젝트 추진**에 더 용이(인센티브 구조, 이해관계 조정 등)
 - 지역단위의 프로젝트 => 성공모형 창출, 확산 => 국가단위 사업으로 확대,제도화

지역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 통상적인 문제: 행재정역량, 지역이기주의, 책임성 등
- 또 다른 문제 : 정책지식인프라
 - 종합적 성격의 발전계획/사업 기획능력의 제약
 - 경험 미흡 <- 과거 SOC,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사업 추진
 - 지역내 정책지식역량의 분산 (대학과 지역의 연계성 취약)
 - 특히 지역완결형 인력계획/사업 역량 미흡
 - 지역발전비전에서 인력부문 계획 결여
 -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교육문제” 에 국한
 - 원인: ‘교육-인력’ 과 ‘지역발전’ 문제의 이원화
 - 초중등 교육행정체제의 문제: 지방자치 vs 초중등 교육자치의 대립
 - 국가차원의 고등교육행정체제의 문제 (지자체-지역대학의 연계 취약)

3 미래-전략 정책지식생태계의 정비

우리나라의 정책지식생태계



국가미래전략 관련 조직은 증가, 그러나 정책역량 향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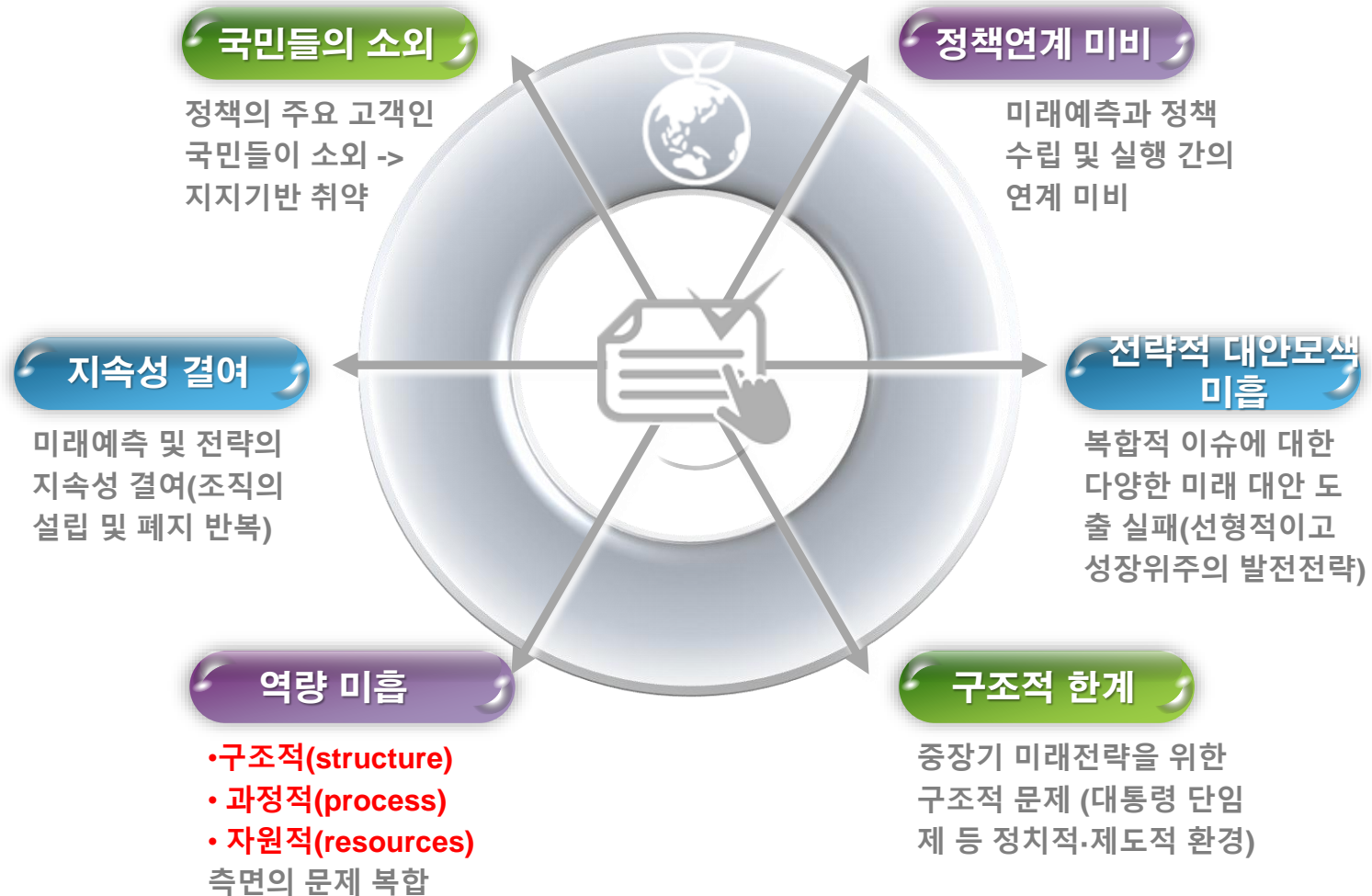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래/전략연구 조직 및 기구 현황



*미래준비위: 2017년까지 운영

우리나라 미래전략 및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미래전략/정책지식역량의 제고 전략

— * 재결합, 개방형 네트워크 *

- 원칙: 1) 신규 기관(New Institute) 설립은 최소한도로
2) 집중화가 아닌 “분산과 견제, 경쟁, 보완”
w/ 국가적/부문내 선도기관
3) Restructuring보다는 Re-processing(w/ 적절한 Re-empowering
(Financial & Human; Individual and Collective))
- 행정부의 중핵기관으로서 **출연연의 기능 및 기관간 연계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Public Policy Engineering 능력**
 - 경사연 기관간
 - 상시적인 연구교류 (forum운영; 협동연구 등으로 제도화)
 - 상향식 전략연구과제 발굴, 기획연구 수행 =>
협동연구과제화, 공론화, 정책화 (정부와의 협력)
 - **경사연 - 과기연(25개):** 인문-과기 융합형과제 발굴, 공동수행

- **출연연 – 지자체 기관간의 연계 강화**
 - 광역권의 capacity 제약 문제 해소
 - 중앙의 국가 문제해결 역량 강화 (reciprocal)
 - * 일부 독립적 기초지자체와의 교류 확대 병행
 - * 경사연 주도로 진행하되 사안별로 과기연도 참여
- **국회 미래연구원**
 - 출연연 등과의 발전적 경쟁 바람직 +
 - 시민사회와의 접점 등 고유기능 창출 (Futures Literacy 등)
- **학계의 미래연구 Hub 창출**
 - 방법론, 기초연구 등 학술적 연구에 특화
 - 출연연은 학계와의 경쟁분업관계 속에 정책문제 해결에 특화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등
- **해외기관과의 파트너십, 제휴 강화**
 - 국내에 미흡한 역량의 보완 (방법론, 글로벌 부문)
 - 국내 미래/정책연구의 글로벌시장 진출 도모
 - 국내 연구결과의 anchoring (탈 정치화)

7. 맺으며...

- 미래는 얼마나 열려있는가? 닫혔는가?
 - 현재의 action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 현재의 action에 대한 제약은?
 - **제약요인**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이해갈등. 비전(/세계관/가치관)의 차이**
- 결과의 불가측성 (unpredictability) 증대
 - 원인: 복잡계(complexity)
 - 해석: **능동적 행위자(Active Players)** 관점에서의 변인
 - 1) 숫자, 2) 개별 에너지 수위(분포), 3) 상호작용 (지향성)
 - 행위자 외 불확실성 증대 (외생적 Unknowns) etc.

우리의 현재 어려움에 대한 해석

-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변곡점에서 서로 다른 역량,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 경제주체, 사회성원들이 혼재되어 **경제.사회 전체의 방향성과 주동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커다란 과도기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실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다기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만큼 문제의 해법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압축성장모형의 잔재**, 친족사회(kinship society) 및 무계층 사회(classless society)의 속성 및 균등주의, 동북아 정세 등 우리의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안보적 요인들이 모두 맞물려 있으며, 과거 우리의 혁혁한 발전성과 자체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감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소위 ‘**승자의 저주(curse of winners)**’라는 부담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

- 우천식 외(2007),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KDI (p19)

* (omniscient/super-neutral/all-benefitting) **초월적 리더** (정치기제/정부)에 대한 향수/myth

우리나라의 미래전망 -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병?

독특한 인적자원의 구성

- 21세기 글로벌 선도형

수평적 네트워킹 사회의 구현 가능성 -

- 우리는 다수 사회 구성원의 학습능력이 높고 균질적이어서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및 유기적인 사회연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음. 진정한 참여-성찰적(deliberative) 민주주의,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그만큼 큼.
- 그러나 학습능력과 참여 동기가 높은 만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이해 조정 기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성도 큼.
-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우천식 외, 2007) KDI